

2006년 12월 28일(목) 15:4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상생협력팀장 박건수, 오충종 사무관 (2110-5162)

“30대그룹 상생경영투자, 내년 2조원에 육박”

- 금년보다 36.1% 증가한 1조9,468억원 투자계획
- 정부, 7대 업종별 · 3대 권역별 상생협력전략 추진키로

12.28일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개최

1. 개 요

- 참여정부 핵심과제인 “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”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30대 그룹회장, 중소기업인, 경제단체장, 학계 인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[참고1]
- 재계에서는 이진희 삼성 회장, 정몽구 현대차 회장, 구본무 LG 회장, 최태원 SK 회장 등 30대 그룹회장,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경제 5단체장, 우수 협력중소기업대표 30여명이 참석
- 정부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, 권오규 경제부총리,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
- 이날 회의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세균 산자부장관의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」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

2. '06년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평가

-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보고를 통해, 지난 해 마련된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상생협력의 이론적·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전략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

□ 이에 따라 기업들은 **상생협력 전담조직**을 설치하여, **상생경영투자를 대폭 확대**하는 등 **상생협력이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**되고 **기업경영전략으로 정착**되고 있음

- * 상생협력 전담조직 : ('05) 4개 그룹 → ('06) 15개 그룹
- * 상생경영투자액 : ('05) 10,401억원 → ('06) 14,307억원(37.6% 증가)
- * 전경련 조사결과, 내년도 30대그룹의 상생경영투자액은 금년 보다 36.1% 증가한 1조9,468억원임

□ 정부의 **상생협력 정책수단**은 기업들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로 **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증가**하는 등 그 **성과가 점차 가시화**

- *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: ('04) 1개사 → ('05) 5개사 → ('06) 20개사
- * 반도체·디스플레이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(1,500억원), 평가앱 개발 등
- * 대·중소 그린파트너십 : 시범사업(대기업 3사, 중기 39사) 결과, 매년 45억원 비용절감
- * 하도급법 위반혐의업체 비율(%) : ('04) 65.8 → ('05) 58.5 → ('06) 55.0

○ 다만 시장성과 사업성이 낮아 **대기업 참여가 저조**하거나, **협력업체 수요에 비해 정부 지원이 적은 사업** 등은 **보완이 필요**

- 휴면특허이전사업은 내년에 휴면특허신탁제도를 도입하고, 연차등록 출원료를 감면하여 대기업 참여를 유도
- 해외공동마케팅사업은 대·중소기업, 정부, 유관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전략품목·시장에 대한 집중적 마케팅 지원

□ 유통, 에너지 등 **이업종으로 확산**을 위해 **제조·판매 상생협의회, 전력·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등 협력프로그램 도입**

- * 지역별 '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' 구성, 제조·판매 상생협의회' 구성('06.12)
- * '전력·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' 결성(535억원),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확대

○ 자동차, 전자 등 일부 제조업 프로그램을 전업종에 적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, **업종별로 특화된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**

□ 2,3차 협력업체로의 확산을 위해 **주요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2,3차 협력업체를 포함**하여 지원

- * 반도체·디스플레이 분야 2,3차 협력업체에 자금 지원(수급기업투자펀드)
- * 2,3차 협력업체 환경경영체제 구축 지원(대·중소 그린파트너십)
- * 대기업과 1차 업체간 납품관계를 기초로 2,3차 업체에 '온라인 네트워크론' 및 '구매전용카드제' 도입('06.11)

- 대기업은 2,3차 협력업체와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고, 1차 업체는 지원역량이 부족하여 지원에 소극적이므로, 지역소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하여 지역내 역량있는 혁신주체를 활용할 필요
- 상생협력의 틀속에서 비정규직·저출산 대응을 위해 비정규직 직업 훈련컨소시엄 확대,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도입 등을 추진
 - 기업들이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, 향후 상생협력 차원에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협력프로그램 위주로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
- 한편,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각각 조사한 상생협력실태 조사와 상생협력지수산정결과에 따르면,
 - 상생협력실적에 대해서 대기업의 74.2%가 적정하다는 입장인 반면, 협력업체의 51.9%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상생협력 실적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(상생협력 실태조사, 산업연구원, '06.11[참고2])
 - 또한 업종별로 Max-Min 방식으로 표준화한 상생협력지수 산정결과, 현재 우리 기업의 상생협력수준은 50점이하로서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(상생협력지수, 중소기업연구원, '06.11[참고3])

3. 2007년 정책과제

-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기존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, 아울러 기업경영전략을 「산업·지역·사회발전 전략」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
- ① **산업별로 특화된 상생협력 추진 ⇒ 산업발전전략으로 구체화**
 - 대·중소기업간 협력구조, 협력형태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·운영
 -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(자동차, 조선 등 7개 업종)를 구성·운영하여, 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

【 산업별 주요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(안) 】

| 프로그램 | 주요 내용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조선 | 대기업 공동발주 구매조건부 핵심부품 R&D | · 대기업(조선소) 전체가 함께 우수부품 업체를 선정, 핵심부품의 공동개발을 추진 |
| 석유화학 | 석유화학-플라스틱가공업간 상생협력기금 조성 | · 석유화학·플라스틱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· 석유화학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|
| 철강 | 테크노파트너십 확산 | · 포스코(포항)의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광양지역 및 철강업계로 확대 |
| 자동차 | 게스트 엔지니어링 | · 협력사의 엔지니어들을 대기업에 파견, 설계지원 등 공동연구 수행 |
| 반도체 디스플레이 | 大-中小 및 大-대기업간 핵심지재권 공유형 공동R&D | · 국내 최초로 컨소시엄(대·중소기업, 대학, 연구소) 중심의 특허공유시스템 도입 · 대기업간 Cross-License, 장비 표준화, 원천기술공동개발 추진 |
| 유통 | 국제화 상품 공동개발 | · 유통-납품업체간 글로벌 소싱단 구성 ·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및 공동상품 개발 |
| 에너지 | 에너지절약 파트너십 | · 대기업 에너지절감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, 에너지절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|

② 지역기업 동반성장체제 구축 ⇒ 지역발전전략과 접목

- 상생협력을 반영한 「지역산업 로드맵」을 수립하고('07.상),
- 3대 권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·추진
- 지역선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「상생형 지역혁신 클러스터모델」 개발

【 권역별 주요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(안) 】

| | 지역전략산업 | 프로그램 | 주요 내용 |
|-----|-----------|--|---|
| 중부권 | 경북 전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인력 아카데미 공동운영 · 협동연구 체계 구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야별 기술인력 공동발굴·양성·활용 · 대중소기업, 대학, 연구소간 공동 R&D컨소시엄 구성 |
| 서남권 | 전북 자동차·기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평·수직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· 상용차 클러스터 R&D역량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협력 체계 및 시험평가·인증 공동 네트워크 구축 · 핵심부품의 공동개발 추진 · 공동 엔지니어링 컨설팅 지원 · 설계 Process/표준정립 지원 |
| 동남권 | 울산 자동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울산자동차 부품·소재 R&D 기술 허브 설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기업 - 1, 2차 협력업체의 기술협력 HUB 설치 및 운영 지원 · 대·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 |

③ 비정규직, 저출산 대응 강화 ⇒ 사회발전전략으로 확산

○ 상생형 이러닝 컨소시엄, 전문기술분야 비정규직 직업훈련 등 비정규직 훈련프로그램을 확대

- 교대제 전환(4조 3교대) 확산을 위해 교대제 전환지원금, 고용유지 지원금,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추진
- 대기업 노사간 협약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여, 그 여유분을 협력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지원하는 '상생형 임단협' 확산 노력도 강화

○ 또한,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법(가칭)」 제정 추진

*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, '가족친화경영 지원펀드' 설립 검토

- 공기업 직장보육시설을 확충*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고, 산업단지(구미, 반월, 서울디지털)내 보육시설을 포함한 「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」 건립 추진

- * 정부투자기관, 산하기관 106개중 보육시설을 갖춘 곳은 16개사에 불과
- *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용역 시행('07, 10억원)

□ 한편, 보고에 앞서 진행된 상생협력 유공자 포상에서는,

- 포스코 최종태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
- 경남알미늄 김원정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
- KTF 정수성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하였고,
- 삼성전기, SK(주), 신세계, 인지디스플레이(중소기업) 등 4개 업체가 대통령단체표창을 수상하였음

[참고1]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개요

1. 행사성격 및 목적

- 지난 1년간 정부와 기업(30대그룹)의 '상생협력 추진성과'를 종합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'기업문화'로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 논의
-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직접 격려('대·중소기업상생협력대상' 수여)하고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

2. 일시/장소 : '06.12.28(목), 15:40~17:00, 청와대 영빈관

3. 참석대상 : 대기업, 중소기업, 경제단체, 학계, 연구소 등 150여명

| 구 분 | 참 석 대 상 |
|------------------|--|
| 30대그룹 대표(30) | ◆ 삼성, 현대차, 엘지, 에스케이 등 30대 그룹 대표 (한전, 도공, 주공, 토공, 철도공사, 가스공사 포함) |
| 중소기업(31) | ◆ 상생협력 우수기업 |
| 수상자(24) | ◆ 대·중소기업 협력대상 수상자(중소기업 포함) - 단체부문(13), 개인부문(11) |
| 경제단체(9) | ◆ 경제5단체장 및 벤처협회장, 여성경제인협회장,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, 중진공이사장 |
| 학계 및 연구기관(10) | ◆ 상생협력연구회 회원(5), 산업연구원장, 노동연구원장, 민간경제연구원장(3) |
| 정부(40) | ◆ 총리, 경제부총리, 산자부장관, 정통부장관, 노동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공정거래위원장, 중기특위위원장 등 |

4. 세부 진행순서

| 시 간 | 구 분 | 진 행 내 용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5:30 | 참석자 도착 | ※ 사회 :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· 영접 : 산자부장관 · 대통령님 포상 친수 · 산자부 장관(PPT) · 진행 : 산자부 장관 |
| 15:40 | 1) 대통령님 입장 | |
| | 2) 대통령님 모두말씀 | |
| | 3) 유공자 포상(5') | |
| | · 훈장 2, 포장 1, 대통령표창 4 | |
| | 4) 영상물 시청(5') | |
| | 5)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 정책방향(5') | |
| | 6) 토론 (40') | |
| | 7) 대통령님 맺음말씀(20') | |
| 17:00 | 대통령님 퇴장 | |

[참고2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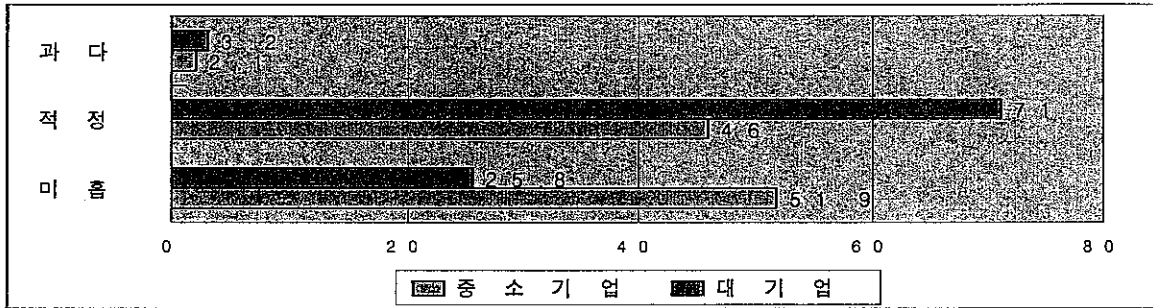
2006년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개요

- 조사근거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- 조사기관 : 산업연구원(KIET)
- 조사기간 : 2006년 10~11월
- 조사방법 : 서면 설문조사
- 조사대상
 - 제조업 및 도소매업 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2개사의 설문서 회수
 - 10대 기업집단 19개사(30.6%), 11~30대 기업집단 24개사(38.7%), 기타 19개사(36.6%)
 - 제조업 및 유통업 영위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조중소기업을 조사하여 955개사의 설문서 회수
 - 주거래 대기업이 10대 기업집단 362개사(37.9%), 11~30대 기업집단 245개사(25.7%), 기타 348개사(36.4%)
- 조사내용
 - 수·위탁거래 현황 : 수·위탁거래 대상기업의 특성, 대금 결제방법, 주문방식, 불공정거래 실태, 상호 신뢰도 등
 - 상생협력 현황 : 분야별 협력활동(자금, 연구·개발, 생산, 판매, 기타), 상생협력 추진의지 평가 등
 -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: 상생협력 문제점, 지원제도 활용도 등

□ 주요 조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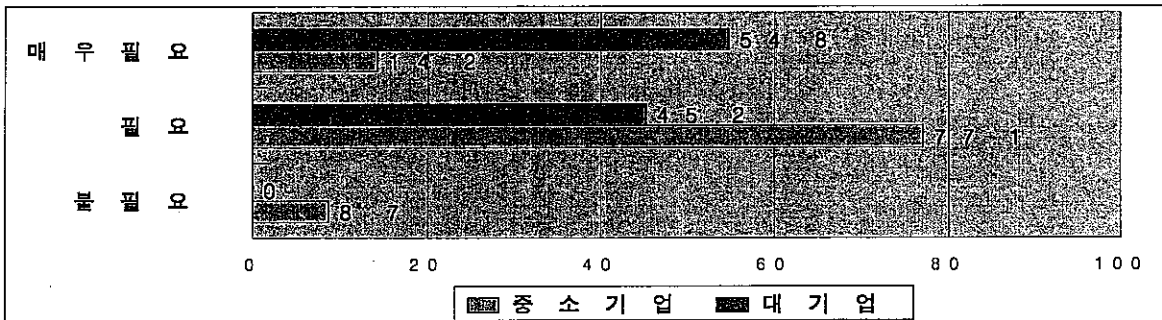
- ◇ 대기기업은 74.2%가 현재 상생협력실적이 적정하거나 과다하다고 답변한 반면, 중소기업은 절반이상(51.9%)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음

< 상생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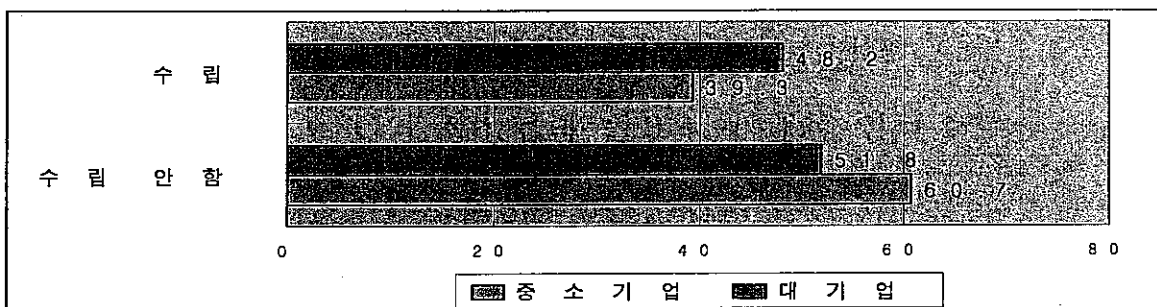
- ◇ 대기기업 CEO의 상생협력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기업이 상생협력에 매우 적극적(매우 필요)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14.2%로써 대기기업 54.8%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

< 대기기업 CEO의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>



- ◇ 주거래 대기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도 중소기업은 39.3%로 대기업 48.4%과 차이

<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여부 >



[참고3]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

□ 조사목적

- 「상생협력 발전모델」과 연계하여 상생협력 수준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를 통해 향후 상생협력 지원정책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에 반영

*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근거

□ 조사개요

- 대 상 : 자동차·전자·조선·철강·석유화학·유통 등 6개 산업 대기업 178개사 및 거래중소기업 1,200개사

* 회수율: 대기업 104개사(58.4%), 중소기업 1,097개사(91.4%)

- 기 간 : '06.10.16~11.30 (40일간)

- 방 법 :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

- 수 행 : 중소기업연구원, KDN(Korea Data Network)

□ 산정방법

- 설문구성 : 협력분야별(역량강화, 신뢰구축, 기업생태계 혁신), 업무영역별(신제품개발, 납품업체 선정, 주문, 조달 등) 협력의 구체적 활동을 현장방문과 전문가회의를 통해 분석·추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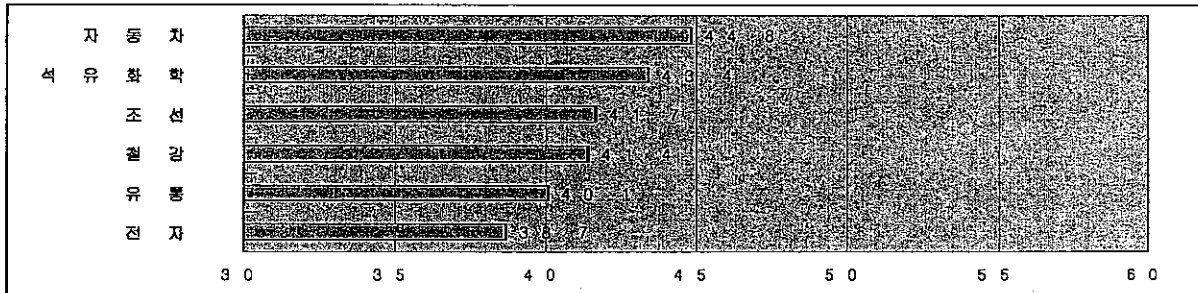
- 산정방식 : 협력활동의 수준을 Max-Min 방식을 통해 표준화

* Max-Min 방식 : 개별적인 협력활동의 수준을 계측하여 가장 협력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를 100점,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를 0점으로 환산

$$Z'_1 = \frac{X - X_{\min}}{X_{\max} - X_{\min}} \quad \text{단, } X_{\min} : X \text{의 최소값, } X_{\max} : X \text{의 최대값}$$

□ 주요 조사결과

◇ 전산업에서 50점 이하 수준으로, 업종별로 상생협력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



◇ 전산업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정보, 제품, 서비스 분야에 비해 자금, 기술, 인력 등 실질적인 분야의 협력수준이 낮음

